



세종정책브리핑

Sejong Policy Briefing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최근 중국 전문가들의 인식

정 재 홍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목 차 】

[핵심 요약]	1
I. 문제제기	3
II.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문제에 대한 인식	7
III.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체제, 유엔사,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인식	14
IV.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21

* 본 정책브리핑은 필자가 지난 10월경 중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 및 개별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필자 및 인터뷰 대상 전문가(들)의 개인적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핵심 요약]

- 지난해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금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음. 이로 인해 북·미, 한·중, 북·중 관계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남.
-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취한 일련의 조치를 감안할 때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함.
- 현재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 방안은 쌍잠정(雙暫停: 북한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및 한·미 연합훈련 잠정중단)과 쌍궤병행(雙軌並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상 동시병행)으로, 이는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통한 각자의 안보적 우려를 고려하여 평화적 수단의 해결을 강조하는 것임.
- 중국은 추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획기적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북·미 간 타협안 내용이 북한 체제와 안보를 위협 할 수 있는 제로섬(零和博奕) 방식이 아닌 상호 안보적 신뢰 구축이 가능한 공동안보(共同安全)해결 방안이 되어야함을 강조함.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6자 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중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는 어느 일방의 양보 혹은 희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과 함께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한반도 종전선언이 채택되며 평화체제가 완전히 수립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입장임.
- 지난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는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 문제로 중국은 북한이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발전 우선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한 이상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와 본격적인 협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북·중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 강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북·중 양국의 경제협력 및 대북 투자 등은 향후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대다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중국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이는 역사적, 정치적, 법적 지위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중국이 배제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함.

- 중국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이슈이자 자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에도 영향을 미치고 역내 지정학적 구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인식함.
-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이후 대북 군사행동의 정당성 약화 및 주한미군의 법률적 지위 문제 제기, 대중포위전략 약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중국을 배제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과 우려를 표출함.
- 중국은 예측 가능한 장래에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추진된다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도 자연스럽게 철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북핵 및 사드문제 등으로 인해 한·중 간 전략적 신뢰가 크게 약화된 상황 속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추진에 있어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호간 신뢰구축이 중요함.

I. 문제 제기

- 올해 개최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함.
 - 이에 지난 10월 하순경 중국을 직접 방문하여 중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비공개 회의 및 개별 인터뷰 등을 가짐.
- 본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주요 싱크탱크인 현대국제관계연구원, 국제문제연구원, 사회과학원, 국제우호연락회 등에 소속된 약 10여명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과 가진 비공개 회의 및 개별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

1. 2018년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

- 지난해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으나 금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이 이루어졌음.
 - 한반도 정세 대전환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평화 만들기의 리더십 발휘로 적대적 남북, 북·미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화와 협상 분위기 조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도래함.
-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북·미 관계가 더욱 개선된다면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안정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및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함.
 -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지난 반세기 형성된 적대적 남북 관계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안정적인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이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발휘를 강조하여 왔음.
- 중국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이 상호 결합되어 남·북·중 3자 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새로운 경제적 부흥 창출과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 분위기 조성이 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현재 시진핑 지도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전략과 한국의 신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을 북한, 중국, 러시아와 상호 연계시켜 새로운 한반도 평화

경제 질서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임.

- 다만 미국이 지속적인 대북제재와 선 비핵화만을 강조하고 있어 중국은 남북 스스로 한반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주도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의 일부 비핵화 조치 이행을 통한 남북-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이전까지 대북제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의 북·미 중재자 역할 발휘가 무엇보다 중요함.
- 최근 한반도는 역사적 대전환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 과거의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 모두 평화공영인식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는 노력과 강한 의지가 중요함.
- 향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한국이 미국을 적극 설득하여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 이행을 이끌어 내고 9·19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계승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달성도 충분히 가능함.

2.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 최근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에 대한 실현 여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그동안 북한의 취한 일련의 조치를 감안할 때 핵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이미 북한은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음.
- 북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획기적인 입장 변화는 ICBM을 포함한 핵무기 보유로 인해 촉발된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 압박에서 벗어나고 국가 경제건설 노선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2018년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비핵화 사전조치로 핵실험과 ICBM 실험발사 중지 등을 선언하였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선포하는 등 북한식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추진과 획기적인 주민생활 개선이라는 국가 전략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의 과감한 전환을 시도함.
-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결단에 대해 주변국들은 인내심과 포용심을 갖고 지지하면서 신뢰구축 조치가 필요하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있어 끊임없는 대화와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과거 실패했던 이라크, 리비아 사태 등을 거울로 삼아 북한의 정당한 권익과 안보적 우려사항을 존중해 주면서 대북제재와 압박 일변도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과의 견고한 신뢰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 중국의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방적이고 강경 일변도의 대북 비난, 제재, 압박 등은 비핵화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북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현재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며 구체적인 행동(풍계리, 동창리 핵/미사일 시험장 시설 폐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선 비핵화 요구 이외에 구체적인 상응조치를 전혀 취하고 않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 진행이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향후 북한의 원활한 비핵화 이행을 위해서는 미국의 합리적인 보상 조치(중전선언 이행 및 대북제재 완화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만을 요구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라는 목표는 상당한 어려움과 딜레마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봄.

○ 시진핑 지도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높게 평가하고 지지하는데 반해 트럼프 정부는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토대로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어 미국의 동시적 상응조치가 없을 경우 북한의 지속적인 비핵화 이행은 상당한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중국과 한국이 협력하여 미국을 설득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며 4자 중전선언에 이어 대북제재 완화 등을 이끌어 낸다면 북한 역시 보다 과감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이 가능함.
- 이에 기초해 볼 때,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를 구체적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4자가 협력하여 북한 비핵화 이행 정도에 따른 상응조치(중전선언, 대북제재 완화 등)를 동시적으로 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3. 최근 북·중 관계 평가

○ 금년에만 세 차례나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양국관계는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

- 이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스스로 과거와 달리 강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중국도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면서 성사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 및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가졌으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구체적 행동으로 지속된다면 북·중 간 경제교류 및 투자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단계적-동시적 비핵 해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 안전판(보험)인 중국의 확고한 지지와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동시에 북·중 경제협력 기본 방향 등을 설정함.
- 2011년 이후 북·중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제관계는 지속되었으며 북한의 대중무역의존도는 2014년 90.2%에서 2017년 94.8%까지 증가하였으며 북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및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북·중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리잔수(栗戰書) 전인대(全人大)위원장의 방북으로 인해 북·중 관계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공고한 관계로 복원됨.
- 지난해까지 북·중 관계는 북핵 실험으로 인해 다소 불편하였으나 한반도에 역사적 대전환이 일어나고 북한 스스로 강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북·중 관계도 급속히 회복되기 시작함.
-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 당사국으로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힘.
- 특히 그동안 북핵문제에 있어 중재자로서 역할을 강조해온 중국은 당사국 역할 발휘를 더욱 강화하여 나가 종전선언의 조속한 이행과 평화체제 수립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함.

II.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문제에 대한 인식

1. 한반도 비핵화 해결 방안

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본 입장

- 현재 시진핑 지도부의 한반도 인식은 과거, 현재, 미래형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으며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미중 패권 경쟁악화로 인해 역내 정세가 불안정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즉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북한의 지정학적 자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북·중 관계를 동맹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조정하는 동시에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탄력적으로 자국의 정책 방향과 범위 하에서 한반도 정책을 적극 주도하며 이끌어 나간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최근 한반도 정세 대전환에 있어 중국이 가장 우호적이고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첫째, 한반도 평화와 안정, 둘째, 북한정권의 붕괴방지, 셋째, 한반도 영향력 유지, 넷째,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여 나가면서 역내 경제발전 유지 및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임.
 - 물론 한반도 정세 변화가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 및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할 것임.
- 그동안 시진핑 지도부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生戰生亂)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견지해 나가면서 동시에 ①한반도 전쟁방지, ②한반도 비핵화, ③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④남북 평화 상생과 공동경제번영 이행을 촉구함.
 - 향후 중국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추진을 이끌어 나가면서 한반도 전쟁 방지 및 어느 일방 주도의 통일 반대,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유지와 주민생활개선, 개혁개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한반도 정세 대전환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임.
- 지난해까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인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유지, 협상과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전략적 노선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임.

- 그동안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였으나 개별국가의 독자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대북제재 반대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줄곧 강조함.
- 금년 3월4일 전인대(全人大)간담회에서 장예쑤이(張業遂)대변인은“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형성된 남북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계기로 북한과 미국이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만나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함.
- 이처럼 중국은“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3대 원칙을 강조하며 군사적 위협과 일방적 제재압박이 아닌 오직 정치-외교적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만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나. 중국식 해법 강조 및 6자회담과 재개

- 현재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 방안은 쌍잠정(雙暫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한·미 연합훈련 잠정중단)과 쌍궤병행(雙軌並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상 동시병행)으로, 이는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통한 각자의 안보적 우려를 고려하여 평화적 수단의 해결을 강조하는 것임.
- 특히 최근 한반도 정세 대전환은 중국식 해법인 쌍잠정과 쌍궤병행이 북핵 해결에 있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해결방안임을 대내외에 정확하게 보여준 증거로 평가함.
- 아울러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기존 대북제재와 압박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 대북제재 완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을 통해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것만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중국과도 실질적인 대북공조와 협력이 가능하고 전제하고 있음.
- 중국은 6자 회담을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이행,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인식과 접근에 있어 미국의 대중 포위압박전략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¹⁾
-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포위망을 무력화시키고 자국의 영향력 확대차원에서 당분간 러시아와의 군사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완충지대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미중간 패권경쟁구도 속에서 한반도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간다는 구상임.

1) 현재 시진핑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른 역내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한·미, 미·일, 한·미·일, 한·미·일·호·인 등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체제 구축에 대해 매우 불편하고 민감하게 인식함.

- 지난 9월25일 제73차 유엔 총회연설에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중국은 남북 개선과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줄곧 노력하여 왔으며 한반도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과 같은 적극적인 상응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한 조속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강조하는 등 조속한 미국의 대북 입장 변화를 촉구함.
- 특히 왕이 부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쌍궤병행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북·미 양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적극 동참이 가능한 6자회담 재개를 거듭 강조함.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6자 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며 중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차이나 패싱'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힘.
- 더욱이 남·북·미 3자가 주도하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어 중국이 주도하고 영향력 발휘가 가능한 6자 회담 재개와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강조함.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화(勸和促談)촉진, 쌍잠정(雙暫停), 쌍궤병행(雙軌並行)의 3단계 해결방법론을 줄곧 주장하였으며, 이미 1단계(대화촉진)와 2단계(쌍잠정)는 사실상 달성되어 다음 단계인 쌍궤병행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 특히 북한은 금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의 첫 중국 방문 이후 이어진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서 단계적-동보적 단계(steps in synchronization)를 통한 비핵화 의지를 밝힌 바 있듯이 중국식 해결방안에 대한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추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획기적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는 있지만 북·미 간 타협안 내용은 북한 체제와 안보를 위협 할 수 있는 제로섬(零和博弈)방식이 아닌 상호 안보적 신뢰 구축이 가능한 공동안보(共同安全)해결 방안이 되어야함을 강조함.
- 이는 9·19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북한 비핵화 조치와 함께 경제-안보 동시보상 방안인 '단계적 접근과 행동 對 행동 원칙'과도 일맥상통하고 중국식 해결방안인 쌍궤병행(雙規並行)과도 완전히 부합됨.

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있어 고려사항

-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줄곧 북핵문제를 놓고 ‘부담론(liability)’ 혹은 ‘자산론(assets)’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중국은 북한이 가진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의 지정학적 가치, 대미 억지력 확보, 한반도의 지속적인 영향력 유지,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 견제, 북한 급변사태 방지 및 미군의 군사개입 억지,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 전략적 이유로 인해 북한 자산론에 의견 일치를 이룸
 -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는 시진핑 지도부가 강조하는 핵심이익(사회주의 체제유지, 주권/영토수호, 지속적인 경제발전 등)과도 직접적인 이해와 연관성을 갖고 있어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급격한 한반도 현상 변경 시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어느 일방의 양보 혹은 희생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북·미 관계의 획기적인 대전환과 함께 대북제재가 해소되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가 완전히 이행될 때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 더욱이 존 볼턴 백악관 NSC 안보보좌관이 주장하는 일괄타결 모델 혹은 리비아식 모델이 아닌 ‘단계적 접근과 행동對행동 원칙’에 입각한 쌍검정 및 쌍궤병행 이행을 강조함.²⁾
- 10월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이후 선제적 핵 포기 조치 및 핵무기 리스트를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 및 종전선언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 북·미 양자간 타협 도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
 - 결국 북한이 제시한 단계적-동시적 해결방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타협안 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북·미 모두 약속에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함.
- 최근 중국 내에서 북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다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은 장기집권이 가능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결국 한반도 비핵화 성공은 북한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닌 주변국들 합의와 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로 미국이 북한 FFVD 비핵화

2) 2018년 6월19일 제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상대방의 안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제로섬(零和博奔)방식이 아닌 북한의 안보적 우려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공동안보(共同安否)방식으로 해결하는데 의견일치를 이룸.

만 요구할 경우 비핵화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매우 강조함.

- 2009년 북한 핵시설 사찰 및 검증문제로 인해 북핵 협상이 결렬된 실패한 경험이 있어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불능화, 동결, 검증, 폐기로 넘어가는 각 단계마다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동시 보상조치(중전선언 이행, 대북 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중국 內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 특히 북한은 과거 이라크, 리비아 사례를 언급하고 있어 상호신뢰구축, 체제보장 및 안보적 우려가 전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FFVD(先 비핵화)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중국도 북한 비핵화를 희망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북한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미국의 과도하고 일방적인 핵시설과 유관 장소 사찰, 검증 등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임.
 - 더욱이 현재 북한이 보유한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재료와 원심분리기 시설 등을 100% 사찰 및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북·미 간 정치적 협상과 타협을 통한 일정부분 합의점 도출 및 신뢰구축 공감대 형성 마련이 중요함.
- 중국은 존 볼턴 NSC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일부 대북강경파들이 북한 비핵화 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폐기, 인권문제 등까지 요구하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북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 만약 미국이 북핵문제 해결 범위에서 벗어난 생화학무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폐기, 인권문제 등을 제기한다면 북·미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임.
-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 일방적 파기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강한 불신과 우려를 갖고 있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가 발의하는 대북체제보장, 대북제재 해제, 북·미 관계 정상화, 중전선언 이행과 평화체제 수립 등과 같은 보다 과감하고 비가역적인 행동조치가 필요함.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자신과의 핵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통한 상호간 신뢰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될 것임.

2. 대북제재 문제

가. 기본 인식과 입장

- 지난 3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는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 문제로 이미 북한의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발전 우선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이상 대북제재 완화 혹은 해제 등에 있어 진지한 고민과 본격적인 협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물론 중국 역시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급격한 대북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나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북·중 관계가 급속도로 회복 중에 있어 점차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함.
-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기존 유엔대북제재를 준수하되 북한주민들의 민생안정 유지차원에서 정상적인 교역은 늘려 나간다는 내부방침을 정함.
- 한편 미국이 대북제재 이탈 방지차원에서 중국 기업 혹은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3자 제재)을 실시한다면 미국의 일방적이고 패권적 태도로 미중 관계 역시 악화될 수 있으며 중국의 미국산 수입 물품 구매 등에도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통상전쟁을 벌이면서 북한과 거래한 일부 중국기업들에 대한 강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미중간 대북제재 공조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명분으로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제재를 가하고 있어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4자 종전선언지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 변화가 없이 중국에 대북제재 공조를 바란다면 이는 다분히 희망적 사고일 뿐임.
- 중국은 최근 북한의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이행 차원에서 한국도 유엔 대북제재 일부 내용해제를 적극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 공조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은 이미 북한이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러시아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엔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시켜 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한국 역시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촉구하고 있음.

- 더욱이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차원에서 대북제재도 중요하나 제재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되며 북한에게 비핵화 과정 지속적인 이행, 국가발전 출로와 경제발전 기회를 줄 수 있는 단계적-동시적 해결방안 마련도 중요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³⁾

※ 중국의 상당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북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단이며, 대북 제재로 인해 전반적인 북한 주민들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대북제재 동참은 불가능하다는 ‘민생’ 예외 노선을 강조함.

나. 북·중 경협과 대북제재

- 최근 일부 한국 언론에서 보도된 중국 내에서 활동 중인 북한 불법 취업 노동자 귀국 조치 등은 유엔 대북제재 조치 일환으로 계획된 조치이나 북·중 경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 최근 북한 경제 역시 자력갱생과 국산화-주체화로 인해 민생경제개선, 물가안정, 환율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민생교역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 음식/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북·중 경협 확대가 예상됨.
- 중국 정부는 북·중 경협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인기는 하나 그렇다고 유엔 대북제재 범위를 넘어서는 북·중 경협 논의 및 대북제재 해제는 다소 어렵다는 내부 분위기도 존재하고 있어, 큰 틀에서 볼 때 유엔 대북제재 범위를 준수하면서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범위 이외에서 북·중 경협 강화와 대북 투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가장 현실성 높은 분야로 유엔 대북 제재에 위반 혹은 접촉되지 않은 여행과 관광업, 음식/서비스업, 민생교역 부분 등을 적극 활성화 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북·중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 강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북·중 양국의 경제협력 및 대북투자 등은 보다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음.
 - 더욱이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이루어질 대북 경제지원과 투자단계에서 북한이 중국의 개혁개방 경험과 각종 노하우 등을 배울 가능성이 높아 북·중 경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⁴⁾

3) 최근 유엔의 대북제재 여파로 해외 북한 노동자 철수, 수산물과 광산물 수출 불허 등으로 인해 외화 보유액이 점차 감소되면서 주민생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북한 스스로 경제 자립도와 국산화도 상당부분 이루어짐.

III.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체제, 유엔사,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인식

1.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

가. 중국의 참여 문제

-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공히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있어 중국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이는 역사적, 정치적, 법적, 지위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는 아주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중국이 배제될 경우 매우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지적함.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수십만 명의 중국인민군이 한반도에서 희생되었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당사국으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 문제를 벗어나 한·중 관계는 매우 심각한 갈등과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함.
- ※ 한반도 종전선언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반도 전쟁 상태 항구적 종식, ▲북한 비핵화 착수 시 바로 평화협정 논의 시작, ▲북한 비핵화 이행 기간 군사적 위협과 공격 및 추가 적대행동 금지, ▲비핵화 완료 및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현행 군사정전협정 유효 등을 포함해야 함.
- 중국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이슈이자 자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에도 영향을 미치고 역내 지정학적 구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바라봄.
- 따라서 중국은 북·중 우호관계 회복과 강화,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과 북·중 간 전략적 공조관계 구축 등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자국의 대북 영향력을 적극 활용하여 협상 논의과정에 절대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입장임.
- 중국에게 있어 한반도 종전선언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 과정은 단순히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동북아 질서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안으로 바라봄.
- 더욱이 중국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제시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

4)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경제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노동당 조직 산하에 개혁 개방 간부국을 새롭게 신설하였다고 알려짐.

결에 중국을 배제하는 실수와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강조함.

- 중국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과 책임감을 가진 국가이자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으로서 당연히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입장임.
- 중국은 1953년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가 마크 클라크 유엔군(미군) 총사령관, 김일성 북한군 최고사령관과 펑더화이(彭德懷)중국 인민군 지원사령관이기 때문에 중국의 참여는 필수적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헤이그 육전법규(1907년)에 의거, 중국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교전 당사자로서 자격·권리·의무와 함께 휴전에 관해서도 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함.⁵⁾

나. 기본 인식과 수립과정

- 중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6년 2·13 합의서를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9·19 공동성명이 역내 모든 국가들이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하여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 개념과 목표를 제시하였다고 높게 평가함.
- 중국은 지난 2005년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발표한 9·19공동성명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에 유관국들과의 합의(consensus)를 이끌어내었으며, 기존 정전협정과 정전체제를 평화협정과 평화체제로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발판과 토대를 마련했다고 인식함.
-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프로세스 과정에 있어 대북제재 해제, 북·미 관계 정상화, 미국 대북적대시 철폐와 체제보장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도 자연스럽게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즉 한반도 종전선언 이행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첫째, 남북 관계개선, 둘째, 한반도 군사 긴장관계해소, 셋째, 평화적인 한반도 주변 환경조성, 넷째,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이르는 일련의 선순환 협상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행, 조속한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함.
- 중국은 북한이 직면한 국제적 고립타파와 체제불안 해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대북제재 해제도 동시에 이행될

5) 중국의 종전선언 참여문제에 대해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1979년 미중 수교가 이루어졌고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진 상황에서 아직까지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북·미가 중심이 되어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피력함.

때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도 실현될 수 있다고 내다봄.

- 이러한 일련의 한반도 평화체제 과정을 통해 반세기 넘게 지속된 한반도의 냉전체제(한·미·일 vs 북·중·러)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번영 질서를 구축해야 된다고 주장함.

○ 현재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목표가 한반도 전쟁상태(technically at state of war)를 공식적으로 종결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조속한 이행을 강조함.

- 중국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가 이행된다면 가장 큰 안보적 우려(주한미군 문제 등)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고 이를 통해 6자회담 재개 및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봄.

※ 73차 유엔총회연설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다시금 6자회담 재개를 강력히 촉구함.

○ 향후 개최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에 있어 일괄타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종전선언 이행과 평화협정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반도 안보구조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봄.

- 중국은 조속히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나 중국이 배제될 수 있는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함.

○ 금년 중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대북 입장변화가 중요하나 여전히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및 핵무기 리스트 제출만을 강조하고 있어 미국의 단계적-동시적 해결 방안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종전선언의 이행은 매우 어려울 수 있어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강조함.

-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북·미 간 심각한 상호불신, 미국의 선 비핵화 강조와 대북제재 유지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한·중 모두 미국을 적극 설득하여 종전선언 추진 및 대북제재 완화 등에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와 협력 채널 구축을 요망함.

다. '차이나 패싱' 우려

○ 최근 중국의 우려는 2000년대 이후 6자회담을 주선하며 한반도 문제 논의

핵심 당사국 역할을 하던 중국이 현재 진행 중인 북·미 간 협상이나 남북 대화 등에서 소외되는 듯한 “차이나 패싱”구도가 형성된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함.

- 이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영향력 유지가 확대 될 수 있는가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미 중국은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추진에 있어 당사국으로 적극 참여해 나간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힘.

○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이후 대북 군사행동 정당성 약화 및 주한미군 법률적 지위 문제 제기, 대중포위전략 약화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중국을 배제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는 강한 불만과 우려를 표출함.

-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은 단순한 한반도 전쟁 종결 선언이 아닌 냉전체제 해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질서 변화에 근본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핵심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어 미국의 중국 배제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함.

○ 지난 9월 12일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이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의 로드맵을 만들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국제사회의 공동보장의 다자체제를 만들어 나가야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직접 연관된 행위자 국가들은 북한, 한국, 미국이라 생각되며 옛말에 줄의 매듭을 진 사람이 그 매듭을 풀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밝히면서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과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함.

- 이에 대해 상당수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원활한 이행과 평화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필요성을 지적함.

○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은 전략적 기회와 도전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바 먼저 전략적 기회 측면을 살펴본다면 ①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철수 요구의 명분 제공, ②북한 부존자원에 대한 선점 효과와 동해의 차항출해(借港出海), 서해의 통강달해(通江達海) 전략 실현, ③ 남·북·중 3국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 증대로 볼 수 있음.

- 전략적 도전측면을 살펴본다면 ①북·미 관계의 개선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상쇄, ②남북 경제협력의 본격적 추진과 북한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 미국, 일본과의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음.⁶⁾

- 이미 중국은 전략적 기회요인 확대와 한반도 영향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이행을 위한 러시아, 북한과의 긴밀한 협의를 본격화하고 이와 동시에 역내 패권을 놓고 미중 갈등에 따른 신 냉전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북·중 관계를 과거 혈맹수준까지 회복시키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북한 역시 중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협력과 공조를 통해 미국의 선 비핵화 강요와 일방적 대북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우군 확보와 종전선언, 평화체제에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략적 발판을 마련함.

2.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가. 기본 인식과 입장

- 중국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유엔사 해체도 이루어져야 되며 이는 미군이 지휘하는 유엔사가 국제법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짐
 - 현재 한반도에 주둔 중인 유엔사는 명목상 유엔연합군이나 사실상 주한미군이 지휘 구조 하에 있으며 이미 중국군은 6.25전쟁 이후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 하였으나 여전히 주한미군은 유엔사를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어 해체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봄.
 - 중국은 조만간 한반도 종전선언 이행과 평화협정이 추진된다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도 자연스럽게 철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강조함.
 -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과정에서 4자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해 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역내 안보 공백 문제(군비경쟁 가속화, 일본 핵무장 가능성 등)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외연확장, 6자 회담 재개,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 등과 같은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
 - 현재 중국은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이 역내 지정학적 구조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한반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안보문제들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남·북·미·중 4자가 함께 모여 구체적인 논의
- 6) 중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남북 관계가 단절되면서 중국기업, 투자자들이 북한 시장을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어 북한이 개혁개방이 추진될 경우 중국이 한국, 일본, 미국 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와 의견을 수렴을 통해 타협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물론 한국은 주한미군 문제는 주권적 결정사안이자 한반도 평화체제와는 완전히 별개사안이라 언급하고 있으나 중국은 가장 큰 안보적 위협요소로 주한미군을 인식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함.

○ 중국은 북핵문제 해법으로 쌍잡정과 쌍궤병행 이행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완화되고 있어 종전선언 이행과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연합사 해체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성격규정 문제도 4자간 논의를 통해 합의점 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봄.

- 한반도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유엔사 해체를 포함한 주한미군 지위와 역할 변경, 한·미 연합훈련 중단,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문제, 한·미(한·미·일) 동맹 재조정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의 일방적인 핵 무기 포기만을 전제로 하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함.

나. 중국의 안보적 우려와 새로운 접근방안

○ 최근 한국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협정과 별개라고 주장하나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전략자산 배치(사드, F-35 스텔스기, 핵잠수함, 첨단정찰기기 등), 역내 분쟁(대만, 동/남중국해 등) 개입 가능성, INF(중거리 핵전력조약)탈퇴 등은 중국에게 매우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안보위협을 주고 있어 남·북·미·중 4자간 협상을 통한 해결안 혹은 타협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명분에 대한 한국의 보다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냉전적 동맹체제에서 벗어나 6자 회담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구축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함.

○ 중국은 정전협정에 의거 미군 역시 중국군과 같이 한국에서 모두 철수를 했어야 했으나 그렇지 않고 한·미 동맹조약 체결을 통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영향력 크게 확대시켜 왔다고 지적함.

- 중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는 냉전시기 주한미군은 대소/대중 영향력 억제차원에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포함한 첨단 전략자산 무기들을 대거 한국에 배치하여 한반도 정전협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방주의적인 군사패권 행위를 보여주었다고 비판함.

○ 그동안 미국이 북핵문제를 구실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실시, 전략자산

훈련과 배치, 한·미(한·미·일) 동맹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대중포위전략에 활용되고 있다는 강한 불만과 문제점 등을 줄곧 제기함.

- 따라서 향후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한반도 냉전해체를 통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주한미군 지위, 역할, 범위 등에 대한 한·중, 한·미, 미·중, 북·미 간 타협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중국은 미국이 여전히 냉전적 사고방식 아래 한·미, 미·일,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 나가고 동시에 북한을 폭정의 거점, 불신국가, 불량국가, 악의 축 등으로 매도하며 이를 통해 대중 포위압박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강한 불신과 의구심을 갖고 있음.

- 특히 중국은 한반도 종전선언 이행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관계 정상화와 대북제재 문제 등이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지역 분쟁에 주한미군이 자동개입 할 경우 중국은 안보적 고려차원에서 모든 무력 수단을 동원하여 개입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에 대한 안보적인 우려를 표명함.

○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영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단계적이고 동시에 이루어져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철수 논의)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 지대 구상을 제시함.

- 중국이 제기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미는 북한의 일방적 비핵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주한미군 철수 및 핵우산 제거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며 미국 개입이 없는 남북 모두 스스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비핵화 상태를 의미로 설명함.

IV.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1. 정책적 시사점

- 최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개별 면담과 회의를 통해 확인되는 가장 큰 특징은 지난해에 비해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확연히 다른 인식과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임.
 -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및 대북제재 문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등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발휘를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 대전환 과정에서 ‘차이나 패싱’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작년 10월에 열린 중국의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 1인 지배체제가 구축되었으며, 2050년까지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실현하겠다는 전략적 구상과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역시 중장기적 대외전략과 미중관계 역학구도와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시진핑 2기 지도부는 2050년까지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을 강조하며 신형국제관계 질서를 강조하고 있어 중국에게 있어 한국의 경제적 가치는 점차 축소되는데 반해 미중 패권경쟁에 따른 안보적 가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이하여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기존 자유주의국제질서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중국식 제도규범을 확립해 나가면서 새로운 중국 중심의 역내질서를 구축한다는 중장기적 구상을 밝히고 있음.
 - 중국은 2050년까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강대국 실현을 위해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역내 정치-경제-안보질서 구축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이를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의 조속한 구축 촉구와 함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남·북·중 3국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중국은 한반도 정세 대전환에 따른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입장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을 세움

- 중국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후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분위기로 들어선다면 자연스럽게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이행, 유엔사와 주한미군 지위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한, 러시아와 긴밀한 전략적 공조를 통해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최근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신설, 대만 및 동/남중국해 갈등 고조, 무역전쟁, 대규모 대중 보복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북·미 간 급격한 관계개선이 중국의 대외전략 및 북·중 관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
- 중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정부분 비핵화 합의를 이룬다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추진을 위해 9·19 공동성명 원칙에 의거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체제구축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적극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임.
- 중국은 6자 회담 재개 및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수립을 통해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역내 다양한 안보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하기 시작함.
- 요컨대, 북한 비핵화 조치로 인해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 북·중 경제협력 및 교역규모(중국의 동북3성 중심)는 급격히 증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남·북·중 3국간 경제교류, 고속철도, 대규모 인프라(전기, 교통, 항만) 건설, 제2의 개성공단 건설 등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음.

2. 정책 제언

- 향후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동결, 검증, 폐기로 가는 각 단계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행에 따른 상응 조치와 보상을 강조하고 있어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접근과 행동 對 행동 원칙’에 입각한 쌍궤병행(雙軌並行) 방식에 의거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 밝힌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함.
- 현재 중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당사국으로서 필히 참여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경우 한·중 관계는 심각한 갈등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향후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과정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동안 북핵 및 사드문제 등으로 인해 한·중 간 전략적 신뢰가 크게 약화된 상황 속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추진에 있어 한·중 간 긴밀한 소통과 협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호간 신뢰구축이 중요함.
- 이를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수립에 있어 한·중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야 할 것임.
-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및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한·중 협력의 초점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보다 집중하는 노력이 중요함.
- 한편 중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미 양국의 급격한 관계개선을 통한 북한의 친미국가 가능성, 중국을 배제한 일방적 남·북·미 3자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한·미가 북한을 설득하여 주한미군 영구주둔 허용 등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과 우려를 보여주고 있어 긴밀한 전략적 대화와 소통이 필요함.
-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중/남·북·미/남·북·중 3자 대화, 남·북·미·중 4자 대화 혹은 6자 대화 등과 같은 역내 다자대화를 주도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함.
- 특히 남북, 북·미, 한·중, 미·중 관계 개선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국 주도의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를 적극 도모해 나가는 노력과 전략이 요망됨.
- 최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 및 남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남·북·중 3국 경제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한·중 유관 정부 부처들 간 실질적 협력과 공조가 무엇보다 시급함.
- 특히 한국의 신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핵심 정책의 하나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과 상호 연계시켜 나간다면 지경화 중심의 새로운 한반도 질서 창출이 가능할 것임.